

12-30 (통권 제 501호)

2012. 8. 1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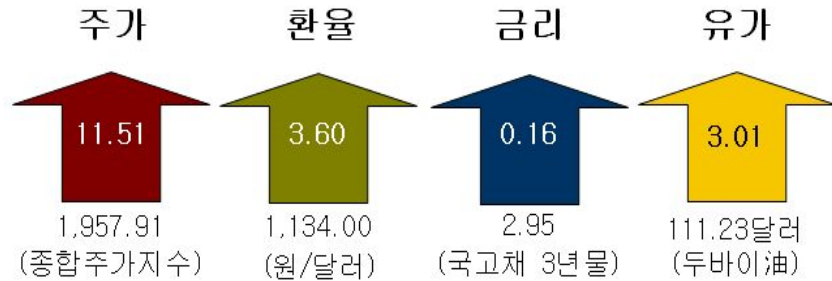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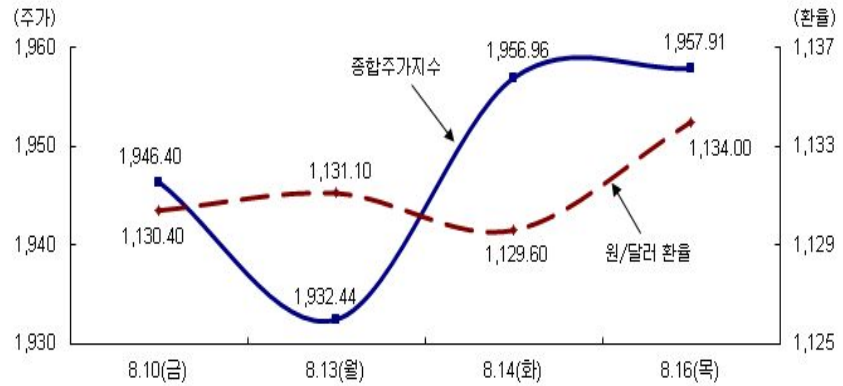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 ‘중산층 의식’의 약화와 내핍생활 확산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0~8.1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동 열 수석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 '중산층 의식' 약화와 내핍생활 확산

#### ○ 중산층의 위축

- 2011년 현재 중산층 비중(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은 64.0%로 떨어져 있으며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도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 중산층 비중의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주관적 중산층 의식과 소비 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봄

#### ○ 중산층 의식의 약화

-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중산층 비중은 64.0%에 달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 '중산층'은 2012년 8월 현재 46.4%에 불과함
  - '나는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
  - 최근 5년간 '계층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1%에 달함  
(※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조사 당시의 주관적 '중산층' 비율은 34.8%)
- 계층 하락의 원인으로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음
- 향후 계층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8.1%로 압도적이었음
  - 향후 계층상승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 '양극화의 진행', '체감경기 부진', '좋은 일자리 부족', '과도한 부채'의 순으로 응답함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
  - 20대는 물가안정, 30대는 주택가격 안정, 40대는 사교육 부담 완화, 50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서 세대별로 차이를 드러냄
-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가구(4인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49만 원이었으며,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0%에 달했음
  - 1998년 당시 중산층 가구의 소득이 248만 원이라고 답했던 것에 비하면 2배가량 증가하는데 그침

#### ○ 내핍생활의 확산

- 알뜰소비를 늘리고, 외식을 줄이는 등 내핍생활이 확산되고 있음
-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보다도 2012년 현재 '집 크기를 줄이거나 싼 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는 응답률이 3배가량 증가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는 응답과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98년 대비 크게 늘었음

#### ○ 시사점

-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대책이 요구되며, 20대는 물가 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30대는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40대는 사교육 부담 완화, 50대 이상은 정년 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함

## 1. 중산층의 위축

○ 중산층 비중은 양극화의 진행으로 2011년 현재 64.0%<sup>1)</sup>까지 감소했으며, 소득분배 지표도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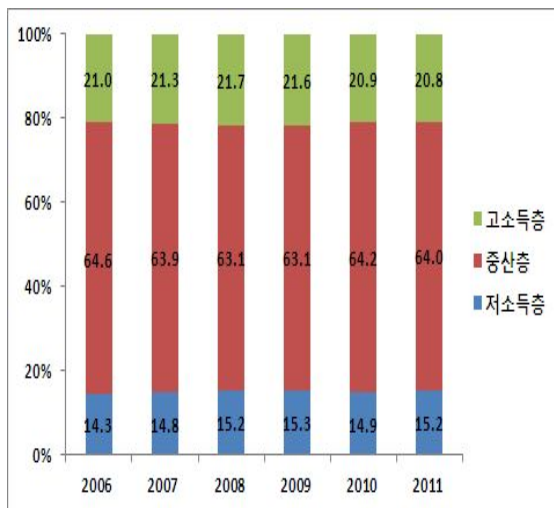
- 전체가구 기준으로 2006년 64.6%였던 중산층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 하여 63.1%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현재 64.0%로 반등했으나 5년 전에 비하면 소폭 감소한 상태에 있음

-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은 1990년도에 75.4%에 달했음
-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2009년 이후 회복하고 있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악화된 상태에 있음

○ 국내외 경제 침체 등으로 소득분배 관련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국민들의 주관적인 '중산층 의식'과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산층 비중의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에 따라 국민들의 중산층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생활양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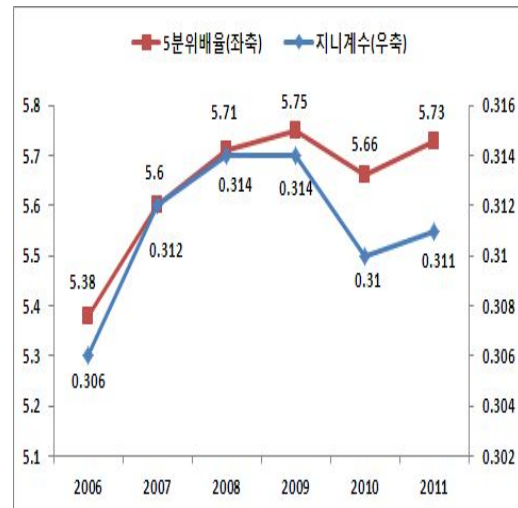
<중산층 비중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1)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임. 1인 가구와 농촌가구를 포함하는 '전체가구'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06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산층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려면,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을 이용해야 함.

## 2. 주관적 '중산층 의식'의 약화

○ 2012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 귀속의식과 생활양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sup>2)</sup>

(1) 금융위기(2008년) 이후 중산층 의식이 크게 약화됨

○ (계층 귀속의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중산층 귀속의식'이 하락하고, '저소득층 귀속의식'은 실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계층 귀속의식이 악화되고 있음

-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c+e)이 50.1%(2명 중 1명)에 달하며, '계층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사람(d+e)이 전체의 19.1%에 달함

- 주관적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반면, 주관적 저소득층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음

·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b+d)은 46.4%에 불과하여, 통계청의 2011년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64.0%에 크게(17.6%p) 못 미침

·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a)도 1.9%에 불과하여, 통계청의 고소득층 비율 20.8%에 크게 못 미침

· 반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c+e)은 50.1%에 달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대적 빈곤율(저소득층 비율) 15.2%보다 훨씬(3배 이상) 많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식 변화>

계층의식의 변화	2012년	1998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고소득층 (a)	1.9%	0.2%
이전이나 지금이나 중산층 (b)	42.8%	32.7%
이전이나 지금이나 저소득층 (c)	34.6%	44.5%
이전에는 상층, 지금은 중산층 (d)	3.6%	2.1%
이전에는 중산층, 지금은 저소득층(e)	15.5%	20.4%
기타 (계층 상승 포함)	1.7%	-
합 계	100.0%	10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2년, 1998년).  
주: 전체가구 기준, 주관적 귀속의식 기준.

<소득기준 계층의 변화>

	2011년	1998년
고소득층	20.8%	19.5%
중산층	64.0%	69.6%
저소득층	15.2%	10.9%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  
주: 가처분소득 기준. 2011년은 전체 가구, 1998년은 도시 2인 이상 가구.

2)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산층 의식의 하락과 생활양식 변화'와 관련하여, 지난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8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을 거쳐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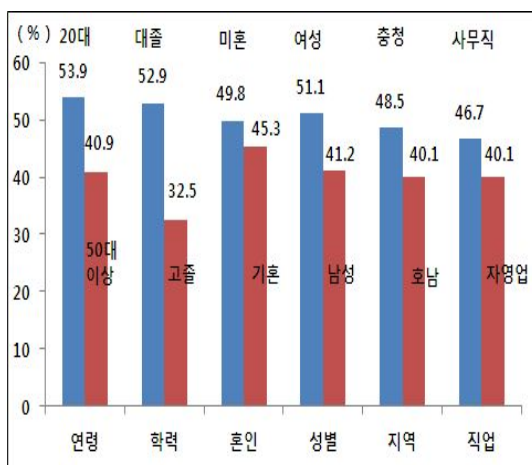
- 50대 이상, 블루칼라,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읍면지역, 저소득 계층, 영·호남지역에서 '중산층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중고령층은 은퇴를 전후한 불안감과 소득감소로 주관적 '중산층 귀속의식'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은 높게 나타남
- 20대, 학생, 주부, 화이트칼라, 대도시지역, 고소득 계층,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중산층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학생의 경우에 '중산층 귀속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가벼운 20대에 '경제적 행복감'<sup>3)</sup>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주관적 중산층' 비중 34.8%, '주관적 저소득층' 비중 64.9%, '계층 하락' 응답자 비중 22.5%로서, 2012년 현재에 비해 '주관적 중산층' 비중은 훨씬 적었고 '계층 하락' 응답자 비중은 훨씬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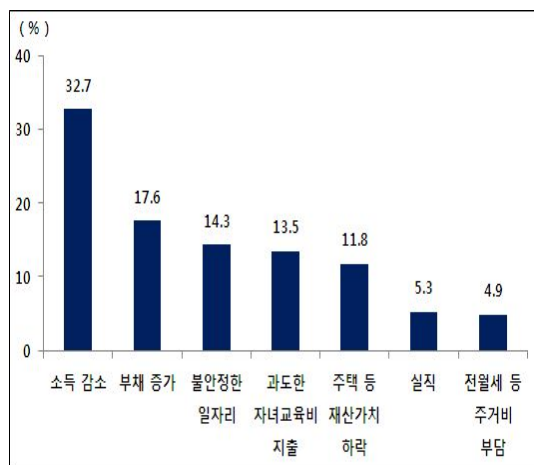
○ (계층하락 원인) '저소득층 하락'의 이유로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를 가장 많이 들었음

- '저소득층으로 하락했다'는 응답자(1,010명 중 245명)만을 대상으로 '계층 하락'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 '소득 감소'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채 증가' 17.6%, '불안정한 일자리' 14.3%, '과도한 자녀교육비' 13.5%, '재산가치 하락' 11.8%, '실직' 5.3%, '주거비 부담' 4.9%의 순 (※복수 응답)

<중산층 귀속의식의 계층별 격차>



<저소득층 하락 이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현대경제연구원의 같은 조사결과(2012년 7월)에 따르면, 2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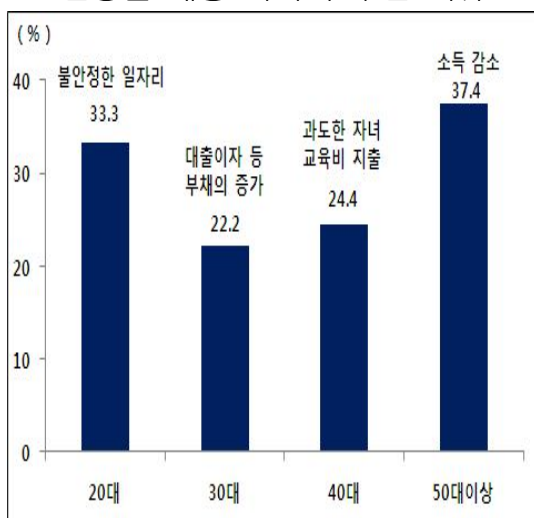
- '저소득층 전략'의 원인을 연령별로 보면 각기 다른 특징이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해석됨
  - 20대는 불안정한 일자리(33.3%)와 실직(7.4%) 등 일자리 관련 응답이 가장 높아서 '청년실업'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음
  - 30대는 '대출이자 등 부채의 증가'에 대한 응답이 22.2%로서 전체 평균(17.6%)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 결혼 이후 주택구입과 관련있다고 추정됨
  - 40대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 응답이 24.4%로서 전체 평균(13.5%)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층 대비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추정됨
  - 50대 이상은 '소득 감소'(37.4%), '불안정한 일자리'(16.5%), '실직'(7.7%)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와 노후 준비 부족에 따른 불안감으로 판단됨

(2) 향후 '계층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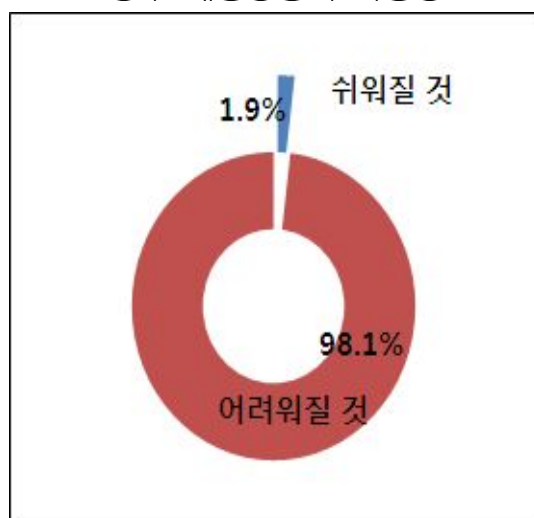
○ (계층상승 어려워짐) 우리나라에서 향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8.1%

- 전체 응답자의 98.1%가 향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계층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가 지배적이며, '쉬워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1.9%에 그침
  - '쉬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1.9%)보다 높았던 응답자는 20대(3.7%), 학생(3.2%), 충청지역(4.8%)이었으나, 이 역시 오차범위(±3.08) 이내에 속함

<연령별 계층 하락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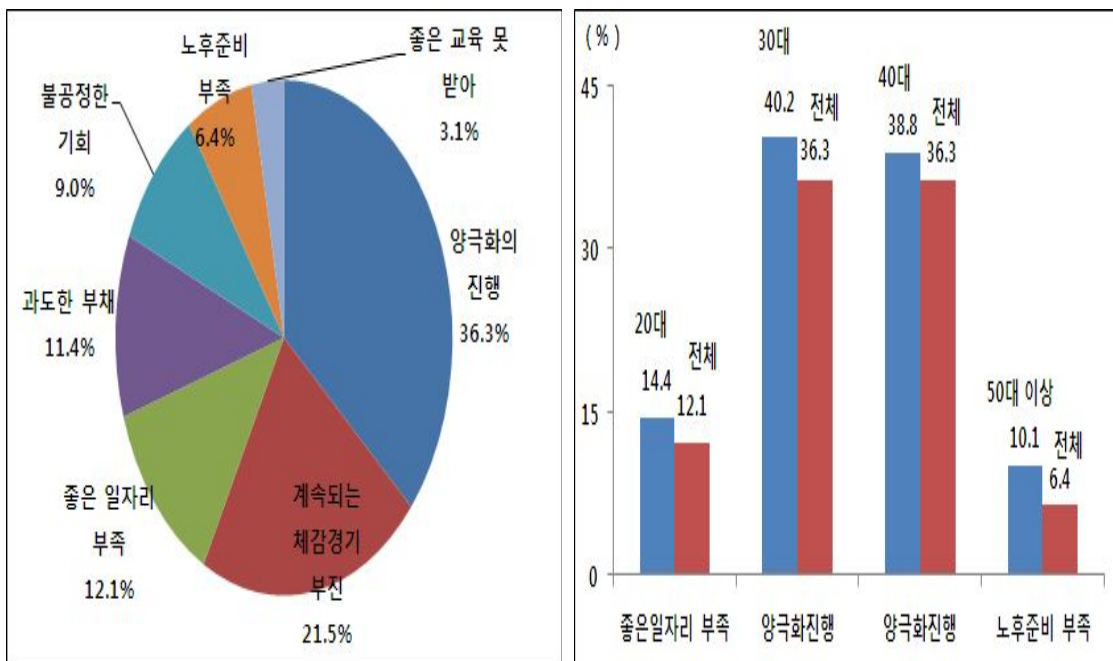
<향후 계층상승의 가능성>



○ (계층상승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에서 향후 계층상승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양극화의 진행'과 '체감경기 부진'

- 계층상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자(98.1%)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양극화의 진행'(36.3%), '계속되는 체감경기 부진'(21.5%), '좋은 일자리 부족'(12.1%), '과도한 부채'(11.4%), '불공정한 기회'(9.0%), '노후준비 부족'(6.4%), '좋은 교육 못 받아'(3.1%) 등의 順으로 나타남 (\*복수 응답)
  - 국민들은 '양극화'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체감경기의 부진'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에서 계층상승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함
- 계층상승이 어려운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각 연령층의 생활에 있어서 체감하는 부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나타남
  - 20대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양극화'와 '가계부채'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은퇴를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 없는 은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대 이상의 경우는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향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본 이유> <연령별 계층 상승 어려운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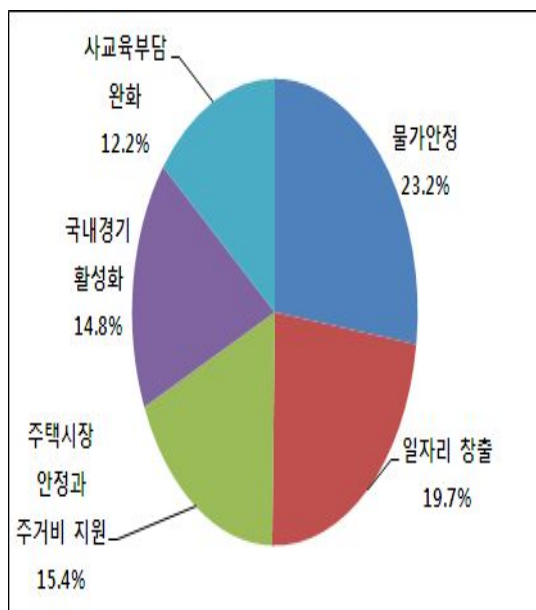


(3)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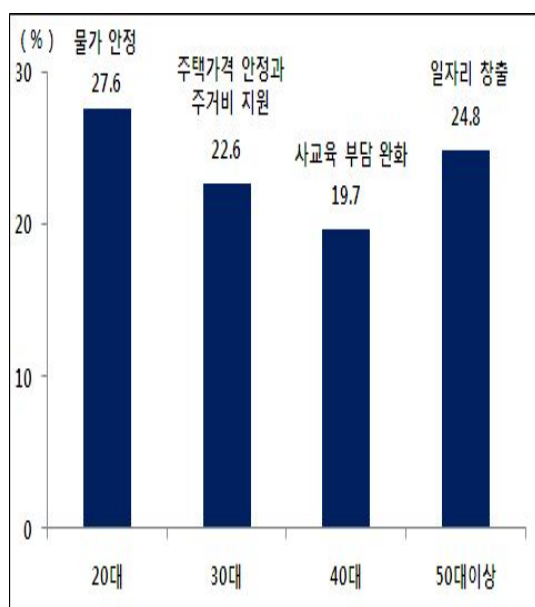
○ (중산층 확대) 중산층 확대 방안으로는 '물가 안정'(23.2%), '일자리 창출'(19.7%),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지원'(15.4%), '국내경기 활성화'(14.8%), '사교육부담 완화'(12.2%) 등의 順으로 응답 (※복수 응답)

- 그밖에 '자녀 양육비 지원'은 7.9%, '복지지출 확대'는 6.7%의 응답률을 기록
  - '물가 안정'이 중산층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응답하여, 2011년 이후의 체감물가 상승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로 많았던 점은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중산층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의미
-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24.8%)에 대한 요구가 평균(19.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20대는 '물가 안정'(27.6%)에 대한 요구가 평균(23.2%)보다 높게 나타남
  - 30대는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비 지원'(22.6%)에 대한 요구가 평균(15.4%)보다 높았음
  - 40대는 '사교육 부담 완화'(19.7%)에 대한 요구가 평균(12.2%)보다 높았음

<중산층 확대 위한 우선 과제>



<연령별 중산층 확대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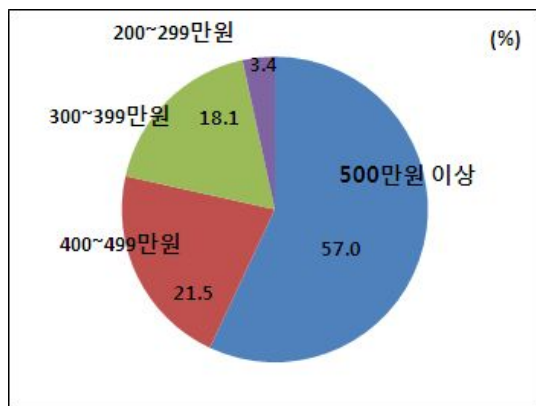


(4) 중산층 가구(4인 가족 기준)의 월평균소득은 '494만 6천 원'

○ (중산층 소득)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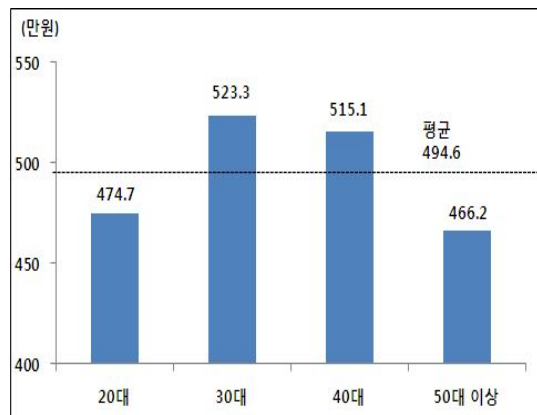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94만 6천 원'이었음
  - 각자 적어낸 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해 보니, '500만 원 이상'의 구간에 57.0%가 분포하여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 원' 구간에 21.5%, '300-399만 원' 구간에 18.1%, '200-299만 원' 구간에 3.4%가 분포함
  - 연령별로는 30대가 평균 523.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537.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제주도가 가장 높았음
- 1998년에 조사된 '주관적 중산층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248만 5천 9백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현재 '중산층 가구'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님
  - 2012년 현재 명목 1인당 국민소득(GDP)은 2만3천 달러로서, 1998년의 7천7백 달러에 비하면 3배가량(연평균 8.3% 증가)함
  - 한편, 주관적인 중산층의 월평균소득은 2012년 현재 494만6천 원으로서 1998년에 비해 2배가량(연평균 5.0%) 증가하는 데 그침

<중산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연령별로 본 중산층 가구 월평균 소득>



주: 연령별로 생각하는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4) 원화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98년 1,082만5천 원에서 2012년 2,674만9천 원으로 2.5배(연평균 6.7%) 증가.

### 3. 내핍생활의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음

○ (알뜰소비) 국민들의 절반가량(47.9%)이 '할인쿠폰과 마일리지 등 알뜰소비'를 늘렸으며, 특히 젊은 20~30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할인쿠폰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알뜰소비가 증가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47.9%, '아니다' 52.1%라고 답하여, 절반가량의 국민들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알뜰소비'를 늘리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에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55.7%와 54.5%로서 평균(47.9%)보다 높게 나타남

· 미혼(55.3%), 학생(53.2%), 전업주부(53.2%), 1인 가구(54.0%), 대구/ 경북지역 (57.3%)에서 상대적으로 '알뜰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마일리지나 할인쿠폰을 이용함에 있어서 20대, 미혼, 학생, 1인 가구 등이 보다 활발하여 신구(新舊) 세대간 격차를 보여줌

○ (외식 감소) 국민들의 60% 이상(60.6%)이 '외식'을 이전보다 줄였으며, 특히 40대와 5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았음

- 외식을 이전보다 줄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60.6%, '아니다' 39.4%라고 답하여, 60% 이상의 국민들이 경기침체로 '외식'을 이전에 비해 줄였음

· 외환위기 당시(74.7%)에 비하면 낮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생활의 변화' 비교 >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그렇다' 응답률(%)	
	2012년	1998년
□ 할인쿠폰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알뜰소비가 늘었다	47.9	-
□ 집 크기를 줄이거나 싼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25.6	9.2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	52.5	35.2
□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	12.2	8.7
□ 외식을 이전보다 줄였다	60.6	74.7
□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	29.3	47.0
□ 자녀의 과외 또는 학습지를 줄였다	34.2	49.9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률(66.5%)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높은 응답률(63.7%)을 보임
- 기혼(64.1%), 자영업자(65.8%), 전업주부(65.3%), '가구소득 400만 원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외식을 즐겼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이사 고려) 4명 중 1명(25.6%)이 '집 크기를 줄이거나싼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98년 외환위기 당시(9.2%)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현재의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움을 보여줌

- 집 크기를 줄이거나싼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25.6%로서, 국민 4명 중 1명이 '주거 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등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9.0%, 29.2%로서 평균(25.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생활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대와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와 자영업자의 응답률이 각각 35.6%와 3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 크기가 작을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적금·보험 해약) 10명 중 3명(29.3%)은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고 응답하여 저축을 늘리기는커녕 줄임으로써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 있음

-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29.3%, '아니다' 70.7%라고 답하여, 국민 10명 중 3명이 저축해 놓은 돈을 활용하여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98년 외환위기 당시(47.0%)보다는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가계의 저축 여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4.7%로서 평균(29.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심각한 상태에 있음
-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와 자영업자의 응답률이 각각 37.9%와 3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 크기가 작을수록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집 크기를 줄이거나 싼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특성과 매우 유사함

**○ (대중교통 이용) 국민들의 절반 이상(52.5%)이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렸으며, 20대와 학생층의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나?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52.5%, '아니다' 47.5%라고 답하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음
- '98년 외환위기 당시(35.2%)보다 응답률이 높는데, 이는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98년 당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패턴을 바꾸고 있다고도 해석됨
-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8.0%로서 평균(52.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생과 블루칼라의 응답률이 각각 70.2%와 6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교육 줄임) 자녀 교육과 관련이 있는 국민 3명 중 1명(34.2%)은 과외 또는 학습지를 줄였으며, 특히 40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자녀의 과외 또는 학습지를 줄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자녀 교육과 관련이 있는 응답자(468명) 가운데 34.2%가 '그렇다', 65.8%가 '아니다'라고 답하여, 국민 3명 중 1명이 사교육비를 줄임으로써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음
- '98년 외환위기 당시(49.9%)보다는 응답률이 낮는데, 그만큼 우리 가계의 사교육 의존도가 '98년 당시에 비해 높아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사교육을 줄였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자영업자,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40대, 블루칼라, 자영업자, 호남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었다고도 해석됨

**○ (귀농 고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국민 10명 중 1명(12.2%)은 귀농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은 응답률이 20.1%에 달함**

- 귀농을 고려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12.2%, '아니다' 87.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1명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귀농을 고려하고 있음

- '98년 외환위기 당시(8.7%)보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50대 이상의 일자리 사정이 '98년 당시에 비해 더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귀농의 응답률이 높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0.1%로서 평균(12.2%)보다 크게 높았음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자영업자가 각각 18.4%와 20.4%로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소득별로는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귀농'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 2012년 현재 국민들은 집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귀농을 고려하는 등 '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음**

- 1998년 당시에는 '외식 줄이기', '적금이나 보험 해약', '과외나 학습지 줄이기' 등의 응답률이 2012년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가게를 꾸려 나가려면 '외식 줄이기', '과외 줄이기', '적금 깨기' 등을 통해 현금 확보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해석됨
- 초대형 경제위기로 주택 가격도 폭락한 상태에서 '집 줄이거나 싼 집으로 이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
- 2012년 현재는 '싼 집으로 이사', '대중교통 이용', '귀농 고려' 등의 응답률이 '9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근본적인 생활패턴의 변화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습효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됨
- 2012년 현재 경제위기에 따른 체감경기 부진이 '98년 외환위기에 못지않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도 해석될 수 있음
- 1954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맞물려 '주거 이전', '귀농' 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민들의 '중산층 의식'이 크게 하락했으며, 알뜰소비를 늘리고 외식을 줄이는 등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음

-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중산층 비중이 64%에 달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 '중산층'은 2012년 8월 현재 46%에 불과함
  - '나는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
  - 최근 5년간 '계층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1%에 달함
-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도 시작되었음
  -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알뜰소비를 늘리고, 60%는 외식을 줄였으며, '집 크기를 줄이거나 짠 집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자도 4명 가운데 1명에 달했음

○ 중산층을 늘리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중산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주거비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중산층의 계층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연령별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준비되어야 함
  - '일자리 창출'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20대 청년층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게 적합한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
  - 집 사느라 부채가 많은 30대를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며, 사교육비 부담이 무거운 40대를 위해서는 '공교육 투자 확대' 등 교육비 대책이 준비되어야 함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참고> '중산층 의식과 생활의 변화' 설문 문항

구분	질문	답변
중산층 의식	①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2012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귀하는 현재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그때나 지금이나 고소득층 (2)그때나 지금이나 중산층 (3)그때나 지금이나 저소득층 (4)그때는 고소득층, 지금은 중산층 (5)그때는 중산층, 지금은 저소득층 (6)기타 (계층 상승 등)
계층하락 이유	② 귀하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1)소득 감소 (2)불안정한 일자리 (3)주택 등 재산가치 하락 (4)실직 (5)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6)자녀교육비 과도한 지출 (7)대출 이자 등 부채의 증가
중산층 평균 소득	③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답식)	( )
계층상승 가능성	④ 우리나라에서 향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1)쉬워질 것이다 (2)어려워질 것이다
계층상승 어려운 이유	⑤ 계층 상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1)체감경기가 계속 어려워서 (2)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3)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4)기회가 공정하지 않아서 (5)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6)노후준비가 부족해서 (7)부채가 많아서
중산층 확대 방안	⑥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늘리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복수 응답)	(1)일자리 늘리기 (2)자녀 양육비 지원 (3)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비 지원 (4)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부담 완화 (5)복지지출 확대 (6)국내경기 활성화 (7)물가 안정
생활패턴의 변화	⑦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나요? - 할인쿠폰과 마일리지 활용한 알뜰소비 증가 - 외식을 이전보다 줄였다 - 집 크기 줄이거나 싼 집으로 이사를 고려 -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 - 자녀의 과외 또는 학습지를 줄였다 -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	(1)그렇다 (2)아니다 (3)해당 없음 (과외/학습지 질문)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8월 10일	8월 1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2	1.83	0.21%p
	엔/달러	81.19	80.66	77.66	78.61	79.01	0.40¥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300	1.2284	-0.0016\$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208	13,250	42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891	9,093	20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79	2.95	0.16%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0.4	1,134.0	3.6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46.4	1,957.9	11.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8월 10일	8월 16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2.98	95.45	2.47\$
	Dubai	88.80	106.75	104.89	108.22	111.23	3.01\$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1.81	302.39	0.5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